

재생에너지 전환 K-RE100 기업 참여율 여전히 바닥

민주 신영대 의원 “달성 저조시 국내 산업 협력에 악영향
인센티브 등으로 ESG경영 지원 ‘참여 활성화’ 목표 해야”

기업의 사용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며, 올해 출범한 정부사업 K-RE100의 참여율이 여전히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산시)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공공기관 350곳 가운데 K-RE100 참여기업은 5.14%(인 18곳)에 불과했다.

지난 2019년 결산기준 기업규모 현황을 기준으로 기업 참여율을 보면, 전체 대기업 2,565개 중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를 포함해 1.16%(인 30곳)이 참여했으며, 중견기업은 전체 (5,007)대비 0.13%(7곳), 중소기업은 전체(74만 1,105)대비 0.0%(4곳)에 가까운 수준이다.

K-RE100은 산업용·일반용 전기 소비자들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입한 제도다.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참여 중인 RE100 캠페인을 국내 사정에 맞춰 도입했다.



이행수단으로는 한전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녹색 프리미엄, REC보다 전력 단가가 낮고 에너지 전환 목표치 달성이 간편하지만 시장이 활성화될수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신영대 의원은 “EU 등으로부터 한국

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40% 이상으로 상향하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RE100의 달성이 저조하게 되면 국내 산업 협력에 매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업들의 낮은 참여율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K-RE100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녹색프리미엄은 기본 요금에 추가요금을 납부하는 기부금 형태의 낙찰제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구조라 볼 수 없다”며 “K-RE100은 당위적 접근이 아니라 인센티브 등으로 ESG 경영을 지원하는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번기엔 참여 기업이 더 줄어 전체 물량 1,231만 9,000MWh의 1.6%인 20만 2,798MWh만 낙찰되는 데 그쳤다.

/유호상 기자

녹색 프리미엄 상반기 참여기업의 작년 전기사용량과 비교해보면 대부분이 지난해 전력사용량 대비 10% 미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K-RE100 참여 기업들의 이행수단이 녹색프리미엄으로, 높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성을 낮출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낙찰 형태로 에너지를 구입하는 녹색 프리미엄은 REC보다 전력 단가가

낮고 에너지 전환 목표치 달성이 간

편하지만 시장이 활성화될수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신영대 의원은 “EU 등으로부터 한국

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40%

이상으로 상향하려는 압박이 거세지

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RE100의

달성이 저조하게 되면 국내 산업 협력에 매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

업들의 낮은 참여율에 대한 철저한 원

인 분석을 통해 K-RE100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녹색프리미엄은 기본 요금에 추가요금을 납부하는 기부금 형태의 낙찰제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구조라 볼 수 없다”며 “K-RE100은 당위적 접근이 아니라 인센티브 등으로 ESG 경영을 지원하는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번기엔 참여 기업이 더 줄어 전체 물량 1,231만 9,000MWh의 1.6%인 20만 2,798MWh만 낙찰되는 데 그쳤다.

/유호상 기자

전문팀정 양성 교육과정 1기 수료식 개최

7월부터 3개월 교육 29명 수료

국제팀정 총연합회(회장 나유인)는 지난 2일 전주비전대학교 평생교육원 3층 강의실에서 팀정사(전문) 자격취득 교육과정 1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은 29명의 수강생과 국제팀정 총연합회 나유인 회장(사) 세계태권도지도관연맹 김창경 부총재, 전주비전대학교 정석훈 대학혁신본부장, 김순정 평생교육원장 등이 참석했다.

팀정사(전문) 자격취득 교육과정은 국제팀정 총연합회와 전주비전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업무협약을 통해 마련된 전문팀정 교육과정으로 공인팀정제도의 도입에 발맞춰 전문팀정을 양성하는 심화 프로그램이다.

1기 참여 수강생들은 지난 7월 17 일부터 약 3개월 간 여러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을 받고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통과해 팀정사(전문) 자격증을 취득했다.

나유인 국제팀정 총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생

업에 종사하며, 학업을 병행해 온



국제팀정 총연합회는 지난 2일 전주비전대학교 평생교육원 3층 강의실에서 팀정사(전문) 자격취득 교육과정 1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강생들에게 축하와 이를 도와준 전주비전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감사 를 보낸다면서 “곧 도입될 공인팀정제도에 발맞춰 국제팀정 총연합회와 전주비전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전문팀정 양성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석훈 전주비전대학교 대학혁신 본부장은 “수강생들에게는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지식을 토대로 전문팀정으로 활동해 시민의 권리구제와 범죄예방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순정 전주비전대학교 평생교육

원장은 “전북도에서 처음으로 개설되는 교육과정인 만큼,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전주비전대학교가 전문팀정 배출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팀정사(전문) 자격취득 교육과정 2기를 모집 중에 있으며, 만 20세 이상이며 학력과 경력에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팀정사 1급 자격증 소지자와 전·현직 경찰관은 필기시험 면제 혜택을 받는다.

/유호상 기자

3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9287건

99%는 시정조치로 솜방망이 처분

민주 윤준병 의원 “법 사각지대 해소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난 2018년 이후 현재까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최저임금법’ 위반건수가 만 건에 육박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1년 8월까지 연도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 결과, 총 8,983개소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위반건수는 2018년 2,067건, 2019년 4,965건, 2020년 731건, 2021년 1~8월까지 1,524건으로 총 9,28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최저임금 주지의 무 위반(제11조)이 6,029건(64.9%)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미지급·종전 임금수준 저하·도급인 연대책임 등 (제6조)에 따른 위반건수는 3,245건(34.9%)로 확인됐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8년 이후 올 8월까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9,287건 가운데 시정조치건은 9,211건으로 전체 99.2%에 달 했으며, 사업처리는 69건(0.7%), 과태료 부과 7건(0.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준병 의원은 “최저임금법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세부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2018년 이후 정부가 사업장 감독을 통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건수가 민간에 유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큰 문제는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위반건수의 99%가 시정조치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최저임금법 준수를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 간 고용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편의점과 PC방 등 단기 아르바이트를 비롯해 최저임금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 해소에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장수군의회 임시회 마무리

장수군의회(의장 김용문)는 지난달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29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처리했으며,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을 승인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문)에서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3억 4,000만원을 포함해 당초 4,443억원 보다 235억원이 증액된 4,678억원 규모이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나금제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올해 준공된 계북면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기자재의 구비와 농가·행정·농협이 협력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한국희)에서 선정된 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13일부터 예정된 제330회 임시회에서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수=고판호 기자

CCTV 관제인력 운영규정, 전남만 준수



전국 17개 시·도의 221개 CCTV 관제센터 중 행안부의 CCTV 관제인력 운영규정을 지키는 지역은 전남만 한 곳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CCTV 통합관제센터 직원 1인당 평균 관제 CCTV 대수는 98대였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영상정보처리 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기준에 따르면,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의 인력산정은 1인당 50대의 모니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1인당 평균 98대로 정해진 적정 모니터 수준에 비해 2배 가량의 CCTV를 더 관제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1인당 평균 관제 CCTV는 179대에 달해 가장 많았는데, 행안부 기준보다 129대, 전국 평균보다 81대 더 관리하고 있었다.

경기도를 제외하면 서울이 154대로 가장 많았고, 세종(109대), 충북(97대)이 뒤를 이었고, 전북은 75대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1인당 관제 CCTV가 44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규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한편, 최근 4년간 지자체 CCTV 통합센터 실시간 대응현황은 총 84만 4,794건으로 지난 2017년 11만 4,345건에서 2020년 29만 9,84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실시간 대응 범죄유형별로는 경범죄가 37만 9,619건(전체 45%)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등 안전대응 17만 7,281건, 기타 17만 2,515건, 청소년 비용 6만 1,055건, 5대 강력범죄 2만 8,515건, 재난 화재대응 2만 6,058건 순으로 확인됐다.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도의회 임시회 오늘부터 15일까지 의정 돌입

도정 등 질문·내년 예산 편성 위한 조례안 등 처리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과 김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 원주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현장을 방문했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위해 쇄선’

송지용 도의회 의장, 김정수 도의원과 원주 학교 방문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과 김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 원주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현장을 방문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육과 방역을 위해 쇄선을 다하는 학교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각 학교가 가진 당면 현안 사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학령인구 감소로 길수록 줄어드는 학생 수 부족과 삼례지역 남자공립고등학교의 부재로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헌별고의 남

녀공학 전환 현안에 대해 언덕 위 비좁은 현부지에 있는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이전이 필요하다는 학교 측 의견에 공감하며, 의회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어, 봉동초등학교에서는 학교관계자와 학교운영위원회 원주교육지원청 장미교육장 등과 학교시설 전반을 살펴보고, 노후화된 급식소의 신축과 후관동 개축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이 2022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축구부를 육성하고 있는 원주

/유호상 기자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로 출자·출연 등의 민관위탁 등의 안 등이 다수 접수돼 평소에 비해 처리해야 할 의인이 많다고 전했다.

송지용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의 뜻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각종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해 전북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도민들께서는 코로나9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일상 생활이 딜답하고 불편하더라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밝혔다.

현재는 1인당 평균 98대로 정해진 적정 모니터 수준에 비해 2배 가량의 CCTV를 더 관제하고 있는 셈이다.